

김용민브리핑



일일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938>



2015년 12월 1~2일(화~수) 합본

지식라디오 개국 관계로 1일자 정상 발행을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며 1일자와 2일자를 합본합니다.

■ 12월 '김용민 브리핑' 제공 광고주

[조건]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www.flowergood.co.kr>

대한공경매사협회 <http://www.kobid.co.kr>

구의동/구의역 대양참치 <http://goo.gl/lgEdl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석간]

7천원운전자보험 <http://cafe.daum.net/7000kim>

재미월드 <http://www.zemiworld.com>

옹해야과메기 0109-700-1144

12월 1일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칼럼 "이한열과 백남기" 일부를 소개하며 시작한다.

"이한열의 장례식에 건국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지만, 이한열 죽음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겨우 국가의 민사상 책임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였을 게다. 이한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이 사라진 건 12년이나 지난 1999년의 일이다.

농민 백남기는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5년 11월14일, 달포 남짓이면 칠십이 되는 노인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물대포는 시위 군중 해산을 위한 장비인데도,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을 향해 무자비하게 쏘았다.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군부정권의 폭두각시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냈던 당시 검찰과 달리, '검찰공화국'의 위업을 달성한 2015년의 검찰은 시늉조차 내지 않고 있다. 직위해제라는 꼼수라도 보여줬던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한열과 백남기. 두 사람 모두 경찰 폭력으로 쓰러졌지만, 죄질로만 본다면, 백남기의 경우가 훨씬 나쁘다. 이한열은 단 한 번의 발사로 그렇게 되었지만, 백남기의 경우는 적어도 20초 이상 지속적으로 발사했다. 직사포로 사람을 쓰러트렸음에도 쓰러진 사람을 계속 쏘고, 그를 구호하려는 사람과

심지어 구급차까지 따라붙으며 정확한 조준발사를 했다.

전두환보다 못한 박근혜도 문제지만, 반복되는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 모두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와야 한다.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독재자의 딸'을 국가지도자로 선택한 우리의 책임이 크고,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져가고 있을까. 자문해 본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말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호들갑이지만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확대되는데 따른 피해를 걱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종교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교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어이없는 결과가 생긴 거죠."

KBS와 인터뷰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어제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몇 달 전 발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올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겨레] 수출 대기업 '수혜'...저가경쟁 소상공인은 '직격탄'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발효로 중국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제단체들도 환영 일색이다. 하지만 해당 분야는 한국 기업들의 주력 수출 품목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분야도 아니다. 결국 관세 철폐 효과가 크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실상은 다른 셈이다.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관세 철폐 속도가 느리고 개방에서 제외되는 제품도 많은 '저강도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개별기업이나 업종별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새나오고 있다. 정유·석유화학 분야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협상에서 농산품과 더불어 시장 보호에 역점을 뒀다는 자동차 쪽 반응도 시큰둥하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 파는 자동차는 대부분 현지에서 만들어 판매해 자유무역협정과 별 관련이 없다"며 "득도 실도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런데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로 중국산 저가 물품들과 생존을 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추가 피해대책 논의에서도 이 분야는 제외돼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불신이 큰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검역 강화와 미세먼지 등 중국발 환경재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이 오늘 대대적으로 문제 삼은 게 있다. 이른바 발전기금이다.

[조선일보] 알아서 내라는 '1兆 기금'

정부와 여야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용도로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원의 '농어업 상생기금'을 기부금으로 걷는 방안에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재계는 "농어업 상생기금은 당초 야당이 주장해온 '무역 이익공유제'의 변형된 형태로 사실상 다를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역이익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강제성 있는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농어업 상생기금을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걷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재계 관계자는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여론 재판과 각종 규제를 앞세워 기업들을 압박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기업들 팔을 비틀어 뺨 뜯어가는 준조세나 마찬가지로"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상생기금의 조성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 한-중 FTA 시행으로 이익을 보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놓겠느냐는 것이다. 조선일보 통일펀드도 그러하지. 세상에 공기업 직원이 어떻게 전원 통일펀드에 가입할 수 있겠나.

[한겨레] [단독] 중 위안화 '기축통화' 대열에...G2 걸맞은 통화위상 확보

국제통화기금이 중국 위안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통화군 편입을 승인했다. 말이 어렵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된 것이다. 위안화가.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와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이 세계 4대 기축통화였지. 중국은 이번 결정으로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위안의 위상을 확보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2020년까지 세계 무역 결제액의 33% 이상이 위안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국제통화기금이 경제 대국인 중국을 끌어들이기구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편입 조건을 낮췄다. 중국 정부의 전 방위적 로비도 한몫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세상 읽기] '간장 두 종지'의 세상사 / 이계삼

지난 주말 조선일보 한현우 주말뉴스부장의 '간장 두 종지' 칼럼은 SNS에서 술한 야유와 조롱을 받아 화제였다. 이계삼 칼럼니스트는 "조선일보에도 드디어 류근일 김대중 주필의 후계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며 뭔가 세상사의 한 비밀을 깨달은 기분이 들었다. 저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어디서 행복을 느끼고, 진심 분노할까. 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 이른바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 권력의 호위무사들에게서 나는 인생의 의미 따위 개나 쥐버리라는 듯 가치의 허무주의를 느꼈다. 수치와 모멸의 감각이 거세되었는지 저들은 화도 잘 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예민하게 주의 집중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글을 읽으며 깨닫게 되었다. 간장 두 종지. 점심 메뉴와 갑질의 기쁨. 그런 것이었다..."

'저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가동될 원전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허술하고 부실한 검증으로 60년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고리 지역) 6기가 가동되고 있고, 340만 명이 30km 반경 안에 사는 곳에 원전 한 기를 더 집어넣고, 그럴 자격이 우리 위원들에게 있는지, 신고리 3호기 없으면 전력대란 일어난다고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하고 그래서 목숨을 끊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울먹인다.) 그런데 지금 전력 남아돌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한테, 이거 허가되면 목숨을 내놓으라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원안위라도 밀양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운다.)'...

지난 10월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47차 회의 자리였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김혜정 위원은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자리였다. 참관하던 밀양 어르신들도 함께 울었다. 그런데, 회의장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은가. 그날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 7명 중 한 명은 아예 고개를 젓힌 채 자고 있었고, 두 명은 졸다 깨다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실 새 없이 스마트

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밀려온 식곤증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회의 내내 흔들린 듯 채팅에 몰두하던 그 의원은 점심 식사 때 ‘간장 두 종지’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간장 두 종지’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지금 ‘총궐기’가 절실한 이유는, 저 ‘간장 두 종지’들로부터 우선 나 자신의 생명과 존엄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간장에 두 종지가 있다면 수구신문에는 두 유력지가 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본다.

[동아일보] [사설] 불법시위대 감싸는 ‘인간벽’, 종교인이 나설 자리 아니다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이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하는 ‘2차 민주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차벽이 있던 자리에 종교인들로 ‘사람벽’을 치겠다”고 밝혔다. 화쟁(和靜)은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신라 원효대사의 중심사상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2010년 출범 이후 조계종 내부 사안뿐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 쌍용차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 온갖 사회 갈등의 중재 역할을 떠맡았다. 하지만 종교가 정파적 경향을 띠고 특정 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비친다면 화쟁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도 아니고 얼마든지 합법적인 시위가 가능한데도 불법폭력시위를 감싸는 것은 사부대중(四部大衆)의 뜻과도 거리가 멀다.”

지금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보다 낫다는 주장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모두에서 소개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칼럼 일부도 다른 부분이다.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가에 의한 경찰 폭력의 양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과감한 선제공격을 일삼는 태도도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 대통령은 시민들을 이슬람국가(IS)에 빚대기도 했다. 온 국민이 범죄를 목격했지만, 범죄를 진압하고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국가작용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87년과 2015년이 다른 점, 그래도 전두환 시절에는 민심이나 여론 동향을 파악하려는 자세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실종되어 버렸다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28년의 긴 세월을 지내놓고도, 쿠데타와 양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때보다 더 후퇴한 시절을 살고 있는 거다.”

동아일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 지금 나아졌다고 보는 게 무엇인가.

[국민일보] 한교연 “불교계, 김진태 의원 신앙 문제 삼지 마라”

개신교 보수 단체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언론회가 각각 논평을 내고 불교계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기독교 신앙을 문제 삼으면서 종교 간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에 대

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김 의원이 지난 20일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해서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불교계는 김 의원의 기독교 신앙을 문제 삼아 이를 종교 간 갈등 양상으로 몰고 갔다”면서 “이것은 다종교사회에서 이웃 종교를 무시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씨가 개신교 교인인 걸 처음 알았다. 일베를 숭상하고 폭력을 지지하며 세월호 유족 등 약자를 지속적으로 짓밟은 자가 개신교인이었다. 이웃 종교 운운하는데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과연 타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지도 짚어볼 대목이다.

[한겨레] 경찰, 5일 집회참가자 ‘씩씩이 검거’ 태세

경찰이 열리는 ‘2차 민주총궐기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검거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집회 현장을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이른바 ‘체포전담반’으로 불리는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 공격적인 체포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한심하다. 이걸 결국 일부 폭력시위대와 10만 넘었던 시위 참가자 전체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지만 이런 것에 굴복하는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맞서는 시민으로 살 것인가, 역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겨레] [사설] 대통령 비판했다고 구속·처벌하는 ‘야만적 인치’

한겨레 사설 한 편 더 본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환경운동가 박성수씨가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선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전단 내용 가운데 “정 모 씨 염문을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희 씨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잡아 가두는 것은, 막걸리에 취한 술주정까지 처벌했던 1970년대 유신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라며 말이다.

또 읽어보자. “박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도 어처구니없다. 경찰은 당사자 고소가 없는데도 박 씨 집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알아서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수사를 벌였다.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선 거의 없는 일이다. 박 씨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에 대한 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멍멍’이라고 외치자 구호를 외치는 불법집회를 했으며 긴급체포했다. 금세 석방되는 박 씨를 유치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체포해 대구 수성경찰서로 압송했다.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할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보석청구를 기각하고 구속기간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 6개월이 끝나도록 가둬두더니, 얼마 전에는 불법집회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까지 내줘 구속기간을 더 늘렸다. 이런 혐의에 비슷한 전례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혼을 내겠다고 경찰과 검찰에 이어, 담당 법관까지

소매를 걷어붙인 형국이다. 법 절차를 가장했지만 사실상 법의 남용이고 오용이다. 박 씨가 최후진술에서 인용한 맹자의 말대로, 이런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법률가라고 할 수도 없겠다.”

폭력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경향신문] 동국대 이사 미산 스님 “이사장 퇴진” 단식 동참

동국대 재단 이사진 가운데 한 명인 미산 스님이 이사장·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4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씨에 동조해 이사직을 사퇴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미산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중 군을 살려야 한다. 동국대 이사의 한 명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한 학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지경에서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는 계기라도 되길 절실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중 군은 탕화 절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 일면 스님과 논문표절 판정을 받은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를 요구하며 4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47일간 물과 소금, 효소만 섭취해온 김 씨는 영양 결핍으로 한때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최근 이사장 일면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막을 방문했고, 교수협의회도 건강을 염려해 단식 중단을 촉구했지만 김 씨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기획] 피해자가 피해 다니는 ‘데이트 폭력’… 처벌 솜방망이·가해자 격리 안 돼 ‘2차 피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 내 폭력’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그 ‘관계’가 잠작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랑싸움’으로 치부되거나, 인정(人情)에 호소하는 가해자 측 요구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잘 모르는 타인을 상대로 한 범죄라면 집 주소는커녕 휴대전화번호도 알기 힘들데, 연인 사이니까 모르는 게 없지 않느냐. 공탁금을 걸거나 합의하면 법원에선 ‘서로 화해했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다. 같은 학교 다니는 처지면 피해자인데도 마주칠까 봐 가슴 졸이며 피해 다녀야 한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재정지법의 한 판사는 “접근금지 결정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 가지 말라’는 게 일반적”이라며 “같은 학교라면 ‘피해자에게 5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런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거나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겨레] ‘홍준표 주민소환’ 36만 명 서명부 제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 전체 유권자의 13.7%인 36만6964명으로부터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서명용지를 상자 93개에 담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인 26만 7416명 이상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선관위 인정을 받으면, 내년 7~8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선관위는 또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는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따라서 서명용지에 대한 확인 작업은 내년 6월 중순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건브리핑’은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대통령 수사도 아닌데”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다.

“특조위의 대통령 조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84조를 들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로 볼 때 기소권도 없는 특조위의 조사를 위헌이라고 몰아붙이는 청와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저서 ‘헌법학원론’에도 “헌법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서술돼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응과 행적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두 밝혀졌기 때문에 특조위 조사가 ‘모욕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와대가 밝힌 것은 박 대통령이 21차례에 보고받고 7차례 지시를 내렸다는 게 전부다. 보고와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한 바가 없다. 이 것만으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하기가 어렵다. 당시 검찰과 감사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9·11테러가 발생한 후 미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년 10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 첫 문단은 “...펜실베이니아가 끝에는 백악관에 관광 온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플로리다 주 사라토사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침 조깅에 나섰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오전 8시46분, 55분, 9시 등 거의 몇 분 간격으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돼 있다.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동을 낱낱이 기술함으로써 대응이 기민하고 적절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는 특조위 조사 종료 후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에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당일 행적이 빠지게 된다. 그런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해법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분명하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칼럼 “‘이봐, 해봤어?’ 이후의 기업가정신”을 소개해 드리며 시작한다.

“100년 전 슈페터는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을 설명한 명저 <경제발전의 이론>을 남겼다. 이 책의 2장은 ‘창조적 파괴의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가(entrepreneur)가 자본주의의 주역임을 웅변하고 있다. 이걸 누구나 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슈페터가 은행가(banker)의 중요성을 역설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업가가 가진 혁신의 잠재성을 포착·선별·지원하는 은행가의 역할 말이다. 은행가가 없으면 기업가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어렵다.

지금 한국경제는 기업가와 은행가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여 년간 실패를 거듭했다. 지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벌 3세들은 스스로의 성과를 통해 권위와 존경을 축적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온실 속의 화초다.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업은 커지고 복잡해졌으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커녕 경영상황을 파악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재벌의 현주소를 ‘무능한 3세’와 ‘정보를 왜곡하는 가신들’로 정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만간 재벌개혁운동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을 완수해서가 아니라, 개혁대상이 망해서 없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삼성·현대차·LG 등 4대 그룹과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몇몇 친족그룹을 제외하면, 상당수 재벌들이 심각한 부실징후를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30대 재벌의 절반이 곧바로 해체되었다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부실이 만성화·악성화된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유사하리라고 본다. 3세 승계를 완성하기도 전에 망할 재벌들이 적지 않다.

대안은 뭔가? 재벌체제에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미국식의 전문경영인체제가 곧바로 작동할 거라고 보지도 않는다. 과도기적 중간 형태는 없는가? 총수의 아들이라고 꼭 CEO를 해야 하는가? 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어떤가? 성과를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내부를 통합하고 외부와 소통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서 이사회 의장의 역할이 직접 전략적 경영판단을 내리는 CEO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게 본인과 그룹과 국민경제를 위해 더 낫지 않을까? 3세들이 스스로 변하지는 않을 터이니,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벌개혁운동을 계속해야겠다.”

재벌이 위태롭다, 예상은 했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진단은 참 무섭기까지 하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본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출판기념회 후) 사무실로 와가지고 책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찰 주고 사가는 거나 카드 주고 사가는 거나 뭐가 다르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신용카드 단말기로 산자위 산하 공기기업에 자신이 쓴 시집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위를 이용해 책을 구매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 의지처로 조계사에 들어온 중생을 실력 행사를 통해 내보내 경찰에 넘기려 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정우식 조계사청년회 지도위원장이었다. 조계사 신도회 임원진 160여 명이 조계사에 모였다. 그제 일부 신도들이 한 위원장을 직접 끌어내려다 몸싸움까지 벌인 뒤, 긴급 회의를 연 거다. 신도회는 한 위원장이 오는 6일까지는 조계사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한 위원장의 신변을 계속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도들도 있었다. 조계사 청년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신도회가 어제 한 위원장과 마찰을 빚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이 과도한 공권력에 맞서서 한 위원장의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친구 박씨 : 일어나. 하나, 둘...(생략)...열...(퍽퍽) 못 일어나겠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XX? (짹) 다시 셀게. 열 센다.]

[피해 여자친구 : 오빠 제발 살려줘.]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감금 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학원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천2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나면 제적될 수 있다는 게 선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는 가해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 “총장·이사장 퇴진”…육신의 한계 넘어선 48일째 단식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힘들어.” 모기 소리만큼 들릴 듯 말한다. 육신의 힘듦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누워 있어도 심한 어지럼증에 괴롭다. 몸의 독소가 피부로 빠져나온 탓인지 온몸에 붉은 반점이다. 녀새에 극히 민감해져서 누구도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 이미 온몸의 근육은 허물어졌다. 혈당도 정상치의 반으로 떨어졌고, 심한 저혈압이다. 몸 군데 군데 통증이 심하다. 모두 단식의 후유증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인 일면 스님과 총장인 보광 스님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며 48일째 단식 중인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은 이미 시선의 초점이 흐릿했다. 90kg이던 몸무게는 이미 30kg 빠진 상태다. 그를 진찰한 의사는 단식을 현 상태에서 중단해도 심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운동권 출신으로 총학생회 간부가 된 김건중 씨는 재단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자신의 전자학적 부부터 고쳤다. 가족들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두 지웠다. 학교 쪽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설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

이다. 불교계와 학내 구성원들은 릴레이 동조 단식에 나서고 있다. 응답하라 동국대 이사장, 총장, 이 외침,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서울신문] 정의당 지지율 수직 상승 왜

정의당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혁신 전 당대회를 역제안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과 혼란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의당 지지율은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11월 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정의당은 2.1% 포인트 상승한 7.4%로 지난 8월 1주차에 기록한 자체 최고 지지율 6.6%를 4개월여 만에 뛰어넘으며 창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새정치연합의 내홍 등 야권 상황에 염증을 느낀 지지층 일부가 정의당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중FTA에서 보듯 새정치민주연합은 본질적으로는 보수정당이다. 자유주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런 정치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절박감의 징후 아닐까.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던 양당 중심의 나눠 먹기식 기득권 정치, 이제 뭔가 반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서울신문] 예산안·민생법안 심야 일괄 타결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심야 회동을 갖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묶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기로 일괄 타결했다. 이렇게 합의를 잘 해주는, 신사적인 야당에게 무엇이 돌아왔는지 자문해본다. 싸워야만 되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싸울 때 안 싸우기도 했던 야당 아닌가라고 답하고 싶다.

[중앙일보] "이준석에게도 밀리지 않나요?"...광주 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호남 민심'을 듣겠다며 마련한 간담회 자리였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 같다. 그러나 호락호락한 호남 민심이 아니다. 한 50대 기사. "한국갤럽이 조사했더니 문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호남에서 5%라는데, 안 의원도 얼마 안 된다"며 면전에서 퍼부었다. 임내현(광주 북을) 의원을 향해 "당신, 내년 총선에서 장담 못 한다"면서 "안 의원도 (서울 노원병 새누리당의) 이준석한테 밀리잖아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얼굴이 붉어진 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40대 김 모 씨는 "지금 새정치연합이 127석이나 가진 야당인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서울 광장에서 물대포 맞아 의식이 없는데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단식농성 한번 해봤느냐"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토로는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기득권과 공천권 쟁기는 당으로 가부렸어요", "호남 민심이 바닥을 치고 분개하는 건 호남을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광주가 괜히 민주화의 성지인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죽비도 그렇지만 이

를 아전인수 격으로 이용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 호남이다.

[조선일보] "호남 출마했던 이정현 같은 사람, 이번엔 왜 없지"

새누리당 내에서 내년 총선 때 서울 강남 3구나 영남에 출마하려는 이른바 '잘나가는' 인사들을 향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와 당의 배려로 지명도와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당을 위해 희생할 생각은 않고 당선만 생각해 텃밭만 기웃댄다는 것이다. 정중섭 행자부 장관은 대구,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영남 출마가 유력하다. 조운선 전 청와대 정무 수석은 서울 서초갑, 광상도·윤두현 전 수석은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산 출마를 검토 중이다. 김무성 대표 측근으로 자처하는 인사들이 서울 강남 지역에 대거 몰려 출마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도 당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서울 서초을에는 정옥임 전 의원이 표밭을 갈고 있다. 안형환·이은재 전 의원 등도 서울 강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동아일보] 미적대던 대형 건설사업, 표심 의식해 줄줄이 발표

확실히 총선 시즌이 온 것 같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굵직한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 계획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경기 시흥시 월곶동과 성남시 판교동을 잇는 복선철도와 여주~원주 단선철도의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정부가 7년간 무려 민간 자본으로 짓겠다며 계획안을 확정했다. 제주 신공항은 지난달 10일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후보지가 결정됐고, 영동고속도로 여주~강릉 구간 등의 재포장 계획도 지난 달 말에 나왔다. 이 사업들의 사업비 상당액은 토지 보상비 등으로 풀려 땅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돌아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계획들은 각 지역의 대표 숙원사업으로 정치 일정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선거를 앞두고 SOC 사업 발표가 쏟아졌던 과거 총선 직전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

이 분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바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오늘 조선일보 조선칼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4대강 사업 반대의 중요한 이유였던 녹조 문제도 고온과 축산 폐수가 근본적인 원인이자, 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당시 야당은 길바닥에 드러누워 "우량 농지 훼손이 웬말이냐"며 반대했고, 서울대의 어떤 석학(?)은 "부자들이 젊은 첩을 태우고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천성산 도롱뇽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고속철도 터널 공사를 금지하는 소송으로 많은 국고 손실을 안겼는데 지금 도롱뇽은 더 늘어났다고 한다. 그들은 그 후 말이

없었다.

물이 넘치는 보는 물을 막는 댐보다 친환경적이다. 선진국 모두 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없고 수자원 관리와 함께 운하로 활용하고 있다. 나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비판에 가슴 아팠다. 정부운하 연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압수 수색을 당했고 우리는 경찰청에 불려가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새로운 평가가 나오리라 믿고 지내왔다. 무엇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는데 역사는 말할 것이다." 맞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지금 평가 중이다. 보에 가둔 물이 있어 그걸로 가뭄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미봉책에다, 아전인수 격 주장까지 더해져 자가발전으로 4대강 사업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강만수 씨 발 언까지도.

제목만 소개해본다.

[조선비즈] [기자수첩] '기금 또 기금...바람아, 멈추어 다오

[동아일보] [기자의 눈/손영일] 'FTA기금' 자발적 기부 누가 믿겠나

[중앙일보] [단독] '1조 기금' 커지는 준조세 논란

한중FTA 통과와 함께 혜택 보는 기업들에게 돈을 걷어 1조원의 상생기금 만들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기업을 대변하는 조중동이 연일 맹폭을 가하고 있다. 핵심 논리는 "상생기금을 자발적 기부로 걷겠다"는 정부의 설명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런 성격의 기부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가입한 청년희망펀드엔 10대 기업이 1000억 원을 기부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드는 데도 10여 개 주요 기업이 수백억 원을 부담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과연 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겠냐 이 말이다. 준조세성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또 있다. 정권이 주체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엔 언론 권력 바로 조선일보다. 통일펀드를 추진하는 조선일보의 '통일과 나눔' 재단. 여기 이사장은 친박 인사인 안병훈 조선일보 사외이사다. 올 7월에 나온 미디어오늘을 보면 "통일과 나눔 기획에 기부해줄 약정자를 부셔 당 수십 명씩 찾아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기자의 증언을 소개한 기사를 실은 바 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요즘 FTA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 '알아서 내라는 1조 기금'이라며 비아냥댄다.

[한겨레]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황당한 준조세일까요?

그렇다면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정말 강요된 준조세일까. 한겨레 이순혁 기자의 분석이다. "일부 언론이 별폐처럼 들고 일어나 기업들에서 각출하는 준조세가 아니냐고 용단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걷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방법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농어촌을 돕기 위해 타협책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상생기금이 준조세처럼 운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면 될 일이지 처음부터 걱정하고 마녀사

냥을 벌일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통령 눈치에 군말 없이 청년희망펀드에 수백억~수십억 원씩 낸 게 누구인지, 이 때는 왜 침묵했는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은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국의 증대'라는 명분 속에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손 놓고 방관하는 것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일보] 돈벌이 수단 된 ISD... 적도 아군도 없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 행태가 급변하고 있다. 2000년대까지 주로 후진국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피해를 본 다국적 기업의 구제책으로 이용되던 ISD는 최근에는 투기자본과 로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ISD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는 제3자 펀딩 방식"이라며 "사모펀드 등 국제 투자자본가들이 로펌을 끼고 ISD 제소 건을 상품화해 투자자를 모은 뒤 향후 이익을 나눠 갖는 식"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이전까지 한 해 평균 10건 미만이던 ISD 제소 건이 최근 매년 40~50건으로 급증한 것도 ISD 자체가 투자 상품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ISD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통상 협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정문을 보면 12개 회원국은 담배산업의 경우 ISD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한·미 FTA보다 퇴보한 ISD 조항을 도입한 우리 정부와 대조적이지?

[서울신문] [한·중 FTA 시대] "농업 살릴 실효성 없이 농민·기업 갈등 골만... 국가 책임 포기하나"

농민들 목소리를 들어보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1조원 기금조성은 재원 마련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뒤로 빠졌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재벌들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든 탐욕을 면책 받고,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FTA를 거침없이 밀고 나갈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에게는 주요 수입원인 쌀값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농민들이 올가을 쌀 수확기 이후부터 정부 수매량 확대와 '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외치며 전국 50여 곳에서 비야적 시위를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인 이유다. 농민들은 "매년 농사비용은 느는데 쌀값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주도하는 등 수급 조절 정책에 실패한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17만원하는 쌀 한가마를 20만 원 이상 받게 해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공약. 그런데 현실은 14만원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겨레] 누가 '헌법'을 유린하는가

그래서 농민들이 서울에 모인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중 한 명은 물대포로 직공을 당해 현재 최악의 상태다. 12월 5일 또 모이려고 하니까 시위 참가자 전원을 검거하겠다는 등 광기의 횡포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오는 토요일 오후 예고된 2차 민주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내놓은 집회 대응 방침을 “청와대 근처에 모이지 마라. 거리에 나와 정부를 비판하지도 마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요약했다. 아직 열지 않은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고 차벽·물대포뿐 아니라 ‘체포전담반’까지 투입하겠다는 경찰의 발상은 헌법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의 대상이다. 공공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핑계로 금지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청와대에 거슬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정부가 70·80년대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현재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며 밝힌 말이다. 지금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프리티안] "박 대통령,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국제 망신"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고 발언한 것이 '국제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당은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 정부의 '야심찬' 감축 목표가 한국을 2030년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의 다배출 국가 자리에 올릴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탄소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발언했는데, 녹색당은 "한국의 배출권 시장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며 "정부가 할당할 16억 톤의 0.0006~0.0007%에 불과한 양만이 거래됐다. 대체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모르면 가만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비행기 타고 파리로 날아가면 한국의 현실은 모두 잊고 가상의 나라 이야기를 늘어놔도 되는가"라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비꼬았다.

[세계일보] 차대통령 "관용·이해 교육... 테러 악순환 끊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테러를 거론하며 “폭력적 극단주의와 문화·종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분쟁지역 어린이들에게 증오가 아닌 화해를, 폭력이 아닌 대화를, 좌절이 아닌 희

망의 꿈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오래도록 유지될 평화의 방벽(The defences of peace)을 세우는 일”이라며 관용·이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라밖에서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하긴 국내에서도 유채이탈이 었지만.

[경향신문] 서울 야구 명문고 감독들 승부조작 정황

야구 특기생들의 대학입시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명문고 감독들의 승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특정 투수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 주자에게 무리한 도루를 지시하고, 심판 배정에 개입하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경찰은 또 서울시야구협회 고위 임원의 역대 공금 횡령 혐의도 살펴보는 등 수사가 아마추어 야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 오늘의 칼럼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가 쓴 한국일보 칼럼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철학, 문학, 예술, 역사, 언어, 정치, 사회, 종교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들을 통해서 자아, 타자, 세계의 경험을 표현하여 왔다. 인문학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새로운 물음들을 통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유하기이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문학자의 위대성은, 해답이 아닌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는 점에 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불경심’과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은 인문학의 의미와 그 사회정치적 함의를 잘 드러낸다.

질문은 심오한 사유의 세계로의 초청장이다. 비판적 사유란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왜’라는 물음표를 붙이게 함으로써,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위험한 사상이란 없다. 사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라고 한다.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우아한 문화 활동이 아니다. 나, 타자,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들과 마주하고 씨름하는 치열한 행위이며, 비판적 성찰과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이 세계를 향하여 자신을 개입하는 사유이고 실천이다. 인문학적 소양이란 확실성을 경계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사유하기, 고정된 정답 찾기보다 새로운 질문 묻기를 배우기, 그리고 상투성에 저항하고 자명성에 물음표 붙이기 등을 통해서 비로소 그 짝이 돌아나게 된다.

인문학을 단순한 문화 활동의 영역으로만 이해할 때, 그 인문학은 탈 정치화되고 탈역사화 된다. 그러한 인문학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사회나 세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게 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천적 삶에 무관심하게 한다. 인문학을 문화적 활동으로만 이해하도록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이 인문학을 탈정치화 함으로써 인문학이 지닌 중요한 비판적 성찰과 세계에 대한 개입의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